한국 외교에 있어서의 전통,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성*

최 정 운 | 서울대학교

한국 외교는 지난 100여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조선말의 전통적 외교로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근대적 외교 그리고 최근에 부상되어 온 탈근대적 외교를 차례로 겪어왔다. 전통적 외교란 일반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 내에서의 외교행위를 말하며, 근대적 외교란 근대 서구의 근대국가체제 내에서의 외교행위를 말하며 탈근대적 외교란 최근 지구화가 진전되며 서구의 근대국가체제가 분해되는 과정에서의 외교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외교 행위는 특정 시대에 국제체제에 의해서 부과된 외교 행위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외교가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통적 외교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근대적 외교는 우리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나아가서 탈근대적 외교는 이미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외교의 문제는 외교에 대한 근대적 이념에 치중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교에 대해 연구하고 사유하는 지적 능력의 확장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I. 서 론

외교(外交, diplomacy)란 간단히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 또는 정치체(political entity)가 다른 정치체와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1] 민족국가 체제가 존속하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척된 이 시점

*이 논문은 1996~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 ·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에서 우리는 외교를 이렇게 애매하게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외교란 인간이 정치라는 활동에 임하게 되면서부터 고대로부터 이루어져 온 보편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외교에 대한 관념은 근대적인 것이다. 첫째, 외교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戰爭)이라는 행위를 배제하고 있으며 외교란 그러므로 주로 언어(言語)의 교환,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며 현실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관계를 말한다. 둘째 외교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정부의 전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외교라는 행위는 문화적으로 특정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외교(外交)라는 말은 유교(儒敎) 경전(經典)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말이었고 따라서 조선 시기까지도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제후나 신하와 다른 나라의 왕 등과 은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다.[2] 근대에 이르러 외교라는 말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단순히 언어의 변화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이해되는 외교란 합리적(rational)이고 전략적(戰略的, strategic)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외교에는 상당히 음모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서 현재 외교는 전쟁과 구별되는 나라들 간의 평화적 관계를 포함하지만 시간(時間)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외교의 중단을 공식적으로는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따라서 외교란 전쟁 중에도 전쟁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쟁과는 사용되는 수단이 다를 뿐이다. 나아가서 이와 연관되어 현재 외교란 전쟁과 평행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전쟁과 유사한 이미지에서 이루어진다. 전쟁과 평행을 이루는 외교란 나라들 간에 우의(友誼)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지만 반면 배신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쟁

---

1)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모순적인 문제는 외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그간 서구 및 미국의 방대한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외교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적다. 다음을 참조. Hamilton & Langhorne(1995); Mattingly(1955); Nicolson(1950; 1954); Watson(1983).

2) 이른바 '人臣無外交'라는 개념은 조선의 경우 근대에 들어오며 복잡한 양상을 띄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전해종(1977).

의 논리라 할 수 있는 전략이 그 핵심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외교란 우정어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에 대한 관념은 서구근대의 외교에 대한 특정한 관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외교라는 국가들 간의 관계는 세계 역사를 통해 시대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 어떤 시기에 어떤 나라들 간의 관계는 다른 시기에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와 달랐다는 것이다.[3] 특히 우리 역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외교에 대한 관념에 따라 다른 방식의 외교 행위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사의 의해 이루어져 온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간의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의 변화에 따라 가끔은 우리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왔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의 외교 행위와 관념의 변화를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외교 행위를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조(朝鮮朝) 시기까지 넓게 보면 근대적 외교, 말하자면 서구근대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와는 다른 종류의 외교를 행해왔고 이를 편의상 '전통적 외교' 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조선말에는 근대적인 외교 관념이 들어왔고 시도되었지만 충분히 근대적인 외교 관념이 이해되지 못했고 실천되지도 못했다. 근대적인 외교가 본격적으로 실천된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근대적인 국제정치체제가 서서히 해체되며 근대적 외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념의 외교가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이른바 '탈근대(post-modern)' 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외교의 형태는 제대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 이론적 논의

위에서 사용한 '전통적 외교' 라는 말은 결코 자명한 뜻을 갖지 못한다. 우리에

3) 이 점에 관하여 이용희는 국제적 행위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통용되는 것은 어떤 권역에 한한다고 주장하며 國際政治圈域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용희(1962).

게 '전통적' 또는 '전통 사회' 등의 말은 근대화 이전이라는 의미에서 일제시대(日帝時代) 이전의 조선(朝鮮)의 문화와 문명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이라는 개념은 우리 역사의 위와 같은 시대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근대 이전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말에 이미 '근대적' 외교가 시도되었고 따라서 우리 역사의 시대 구분과 '전통적'이라는 외교의 양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명쾌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이라는 사회과학 개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통(tradition) 또는 전통적(traditional)이라는 말은 결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들은 흔히 우리가 '전통적 사회'라고 일컫는 종류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말이었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서구에서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비판을 제기한 이후였다(Burke 1968). 그는 프랑스 혁명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치닫는 이유를 프랑스 지식인들이 사회를 단순한 원리로 이루어진 기계적 실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사회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유기체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많은 편견(prejudices)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들은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존재 이유들을 갖고 있으며 버크에 따르면 사회를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창조를 위한 폭력적 파괴가 아니라 사회의 오랜 제도들과 편견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서히 진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적으로 전통이라는 개념은 전통적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 근대 이전 사회의 여러 정치 · 문화 · 사회적 요소가 새롭게 부각되며 만들어진 말이었다.[4)]

버크의 이러한 사상은 서구 근대의 보수주의(Conservatism)를 형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통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치사상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서구 근대의 보수주의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복고주의나 반동주의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대, 주로 19세기에 등장한 전통이라는 개념은 그 후 서구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과 결부되어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들어오면 동아시아 지역에도 전파되었다. 전통의 개념은 결국 근대(moden)이라는 관념과 연관되어 근

4) 서구에서 전통 개념에 대하여는 최정운(2002)를 참조. 또한 좀더 상세한 논의로는 Shils (1981)이 있다.

대와 대조되는 요인들을 일컫는 말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어떤 특장한 요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modern)라는 개념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이른바 근대(modern)란 서구에서 18세기 후반 계몽시대(Enlightenment)에 등장한 서구 역사철학의 시대구분(periodization)에서 고대(ancient), 중세(medieval)와 구분되는,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한다. 많은 학자들은 중세부터 근대로의 변천 과정에 흔히 15~6세기를 르네쌍스(Renaissance)라는 시대를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근대의 정확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6~7세기 이후를 말하며 혹자는 19세기 이후를 말하기도 한다.[5] 근대는 정치적으로는 주로 16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종교개혁(Reformation)과 종교전쟁, 특히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이후의 시대를 지칭한다. 총제적으로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교회의 영향을 벗어나 세속적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 체제의 성립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을 정치 · 경제적 특징으로 한다. 문화적으로는 세속주의(secularism)를 배경으로 데카르트(Decartes)로부터 비롯되는 합리적 과학적 철학의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암흑기' 라고 그들이 부른 중세를 벗어나 르네쌍스 이후, 근대라는 시대를 인류의 진보(progress, progrès, Fortschritt)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성(理性)의 '빛' 이 나타난 시대로 제시하였다. 서구 근대의 이성 개념은 종교개혁에 따른 근대국가와 자본주의라는 제도적 질서를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기보존(self-preservation)과 권력(power), 그리고 이해(interest)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은 수학적 구도를 통한 관찰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6]

근대와 전통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제시되었다(Weber 1976: 1978). 그는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은 합리적(rational) 문화 또는 합리적 인간의 역사적 등장이었다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에 이은 칼빈주의(Calvinism)를 합리적 인간의 모태로 보았다. 칼빈주의의 교리에 의하여 구원을 구하는 인간은 극도의 고독에 처하게 되었고 이 고독에서 구원의 징표

---

5) 대표적으로 근대에 대한 연구에서 대표적인 철학가인 Michel Foucault는 17세기부터의 시대를 l'Age Classique라고 부르고 19세기부터를 근대로 부른다. Foucault(1966).

6) 근대성과 근대 서구의 理性에 대한 간략한 토의로는 다음을 참조. 최정운(1999: 90-111).

를 구하는 인간은 근대의 합리적 부르주아의 원형이었다. 또한 베버는 그의 정치사회학에서 근대적 지배와 전통적 지배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현대 사회과학에서 전통의 개념은 주로 여기에서 도출되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적 지배는 관료제(bureaucracy)를 핵심으로 하며 관료제는 합목적성을 지배의 정통성(legitimacy)의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 지배와 대조되는 지배 형태로 카리스마적 지배(Charismatic Domination)과 전통적 지배(Traditional Domination)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전통적 지배는 근대 이전의 지배 형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유형들을 포함하는 커다란 분류로서 전부터 행해지던 지배 행위를 따르는 개인적 지배 원리로 특징짓고 있다. 한 마디로 베버에게 전통적 지배란 관습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정치 행위이며 따라서 전통적이란 모든 행위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보다는 전부터 행해지던 행위 유형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문화로 제시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제시되어 현대 사회과학의 파라다임(paradigm)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경험적인 이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를 이념적 목표로 삼고 있다.[7] 여기에서 근대적(modern)과 대비되는 전통적(traditional)이라는 개념은 베버의 이론에 근거하여 비서구 지역의 문화와 근대 이전의 사회문화 전반을 말한다. 특히 전통적 행위(traditional action)라는 개념은 근대 문화의 핵심인 합리적 행위(rational action)와 대칭되어 정의된다. 합리적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행함에 있어 행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합리적인 행위가 늘 예측한 결과를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합리적 행위는 나름대로 결과를 확보하려는 의도(intention) 또는 의미(meaning)로 규정된다. 그리고 결과를 확보하려는 합리적 행위는 근대적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합리적 행위에 반하여 전통적 행위란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 습성적인 또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칭하며 비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회 · 정치적 행위는 습성적인 또는 관습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아무리 야만적인 사회라 해도 정치적 사회적 행위가 습성적으로 합리적 사고 없이 이

7) 근대화 이론에 대하여는 엄청난 업적이 있으나 전형적인 경우로는 Eisenstadt(1973); Lerner(1958)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루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베버의 전통적 지배 이론을 잘 못 해독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최정운 2002, 20-23).

이상의 전통과 근대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유추해 보면 외교의 한 유형으로서의 전통적 외교는 개념적으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외교는 여기에서 근대적 외교와 다르고, 근대 이전 시기, 주로 조선 시대까지 주로 행해지던 외교를 통칭한다고 일단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 말기까지 이루어지던 외교 행위를 일괄적으로 습성적이고 관습적인 행위로 치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말까지의 외교의 대부분은 조선 초부터 행해지던 외교의 연속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상당부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통적 외교와 대비되어 근대적 외교란 간단히 말하면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라는 제도와 이념에 근거한 외교 행위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서구 외교의 근간인 상주(常駐) 외교는 르네쌍스 시대부터 이루어졌다(Anderson 1993; Mattingly 1955). 그러나 근대적 외교란 근대의 주권 개념이 등장하고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 이후부터 세속적 왕권에 근거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진 외교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절대적 주권(sovereignty)에 근거한 왕권이 자율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 이해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로서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국가간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행위를 근대적 외교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교 행위는 국제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서구 국제법의 근간은 서구의 전통적인 자연법(Law of nature) 관념과 국제정치의 유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 권력 간의 약속, 즉 조약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탈근대적 외교' 또한 공통적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탈근대'라는 현대에 회자되고 있는 용어와 '외교'라는 말을 결합시킨 말로써 근대적 외교와 구분되는 종류의 외교 행위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탈근대란 복잡한 의미를 지닌 철학 용어이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대라는 독특한 문화나 문명이 극복된, 또는 그러한 문화와 문명이 해체된 시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탈근대적 외교란 근대 특유의 외교와는 구별되는 근대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외교 행위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란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는 흔히 근대국가라는 전쟁의 주체와 자본주의가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럴 경우 탈근대란 근대국가라는 외교의 주체가 달라지는 시대를 지칭하며 따라서 외교라는 행위의 주된 기반이 변화하는 이상 외교라는 말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8)]

III. 전통적 외교

우리나라가 근대 이전에 인접국가와 맺고 있던 관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근대 이전의 상당 시기에 걸쳐 이루어져 현대까지 그 잔재를 간과할 수 없는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행위들을 우리는 전통적 외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우 전통적 외교란 조선(朝鮮) 건국 이래 명(明)나라와 청(淸)나라와 맺고 있던 관계의 유형을 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명나라 이래 중국은 우리에게 특정한 관계를 강요해 왔고 따라서 명나라 이후의 시기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에 근거한 천하질서(天下秩序)가 실제로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9)]

천하질서는 천하와 그를 구성하는 나라들로 이루어지며 중화라고 지칭하는 중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중국 황제인 천자(天子)에게 예(禮)를 갖추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질서를 받아들임을 선언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관계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게 주변의 나라에서 정해진 시기에 조공(朝貢)을 바치고 정해진 예(禮)를 갖추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근대적 의미의 주권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천자가 인정하는 한에서는 그들의 내치에서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외교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 라고 불려왔다. 이러한 관계는 물론 중국으로서는 오랑캐들로부터의 침략을 예방하고 자신의 안보(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 등의 주변국으로서는 대륙에

---

8) 국제관계에 본격적으로 탈근대(post-modern)이라는 개념을 써서 논한 학자는 많지 않지만 이용희(1994)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탈근대적 시각을 제시한 경우일 것이다. 현재로서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는 주로 '지구화(globalization)'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Globalization에 관한 대표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은 Baylis & Smith(1997)이 있다.

9)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 질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김한규(1982); 동덕모(1984); 전행종 외(1988)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항하여 엄청난 군사력에 호소하지 않고도 생존(生存)을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 왔듯이 조선으로서는 자주 정신을 희생해왔다는 점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는 안보 외에도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수입하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문명 수준을 인정(認定)받고 존엄성(dignity)을 확보하는 문제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대관계는 중국이 조선을 정치 ·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조공에 따른 중국의 답례는 비교적 후한 편이었고 예의(禮儀) 또한 일방적인 굴욕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중국과 조선은 규정된 외교 관계 외에 개인적인 왕래와 교신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따라서 공식적인 사신(使臣) 교환 외에 여타 관계는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중국과 조선의 외교의 절차와 내용은 천자가 규정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거나 조약을 맺는 등의 적극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예(禮)의 영역에서 규정되는 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규범으로 인식되었고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의 영역이 아니었다. 나아가서 명과 청은 조선과 중국과의 양자 관계만 규율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명과 청은 조선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 특히 서구 제국과의 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말하자면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천하는 열린 세계가 아니라 닫힌 세계였고 그 경계는 중국이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이 원하는 만큼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었고 중국이 원하지 않는 나라와의 관계는 전혀 시도할 수 없었다.[10)]

또한 전통적 외교 관계와 행위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이상 외교는 전문적인 분야로 성립되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같은 분야로 여겨졌고 따라서 예조(禮曹)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였다. 또한 외교 관계를 전문적으로 행하고 연구하는 전문 인력도 전혀 없었다. 단적으로 중국과의 외교는 사람들의 관혼상제(冠婚喪祭)와 동일한 종류의 의식을 정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그런 문제의 일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통 외교 또한 법적(法的)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국제정치 관념에서는 '안과 밖'의 영역의 구별도 존재하

10) 조선 후기의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구선희(1999); 권석봉(1986).

지 않았다.[11)]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서구 제국들이 적극적으로 동북아세아에 진출하자 조선도 서구열강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던 천주교의 문제는 서구 열강과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갔고 계속적인 서구 열강들의 통상 요구에 따라 조선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이능화 1968; 민두기 1986).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중국 외에 서구와 통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특히 당시 불법화되어 있던 천주교는 유교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1863년에 집권한 대원군(大院君)은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로 서구의 문화 자체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1860년대부터는 프랑스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조선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없었던 서구 열강들이 잠시 물러난 틈에 조선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변화는 조선에게 지속적이고 피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1868년 일본이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서구식 근대국가로 탈바꿈하자 조선은 전통적인 외교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은 종전에 조선과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 간에 이루어지던 전통적 사대 외교를 서구식 근대국가의 외교 형태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조선은 이를 거부하였다. 1876년 일본은 군함을 보내 위협했고 조선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처음 외국과 맺은 서구식 불평등조약이었다(권선홍 1986; 손승철 1994).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과 외교 관계를 맺도록 주선하였다. 결과적으로 1880년대 초 조선은 본의 아니게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의 주선에 따라 미국 등과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외교 관계을 맺었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朝廷)과 지배층의 대다수는 근대적 외교를 거의 이해하지도 못했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모순을 이루었다. 겉으로는 근대적 외교 관계를 일본, 청, 러시아 그리고 서구 열강들과 맺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근대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모순은 실제로 을사늑약(乙巳勒約)까지 지속되었다(금장태

---

11) 조선 말의 전통적 외교의 기구에 대한 연구로는 김수암(2000); 전해종(1966)을 참조.

1984; 동덕모 1983; 정옥자 1998).

1880년대 초 조선에는 당시 주일본 청국공사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이라는 책자가 김홍집을 통해 들어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황준헌의 조언은 조선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지만 당시 조선의 유교적 지식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황준헌 1988). 일단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자체가 전통적인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었고 외교 관계를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것도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전국의 유생들은 『조선책략』을 비난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편 정부에는 1881년 초 새로운 외교 업무를 위해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설치되고 1883년 1월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설치되었다. 1880년대에는 일본, 청국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의 상주 외교사절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1887년에는 주미전권대신(駐美全權大臣)이 미국에 파견되었다.[12)]

외형적으로 분명히 1880년대에는 조선에 근대적 외교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880년대를 통해 조선에는 개화(開化) 또는 근대화를 이루려는 조직된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당은 완전히 소탕된 상태였고 당시 그나마 서구제국들과의 통상과 교류를 주도하던 민(閔)씨 일가들은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하여 전혀 근대화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다. 또한 전체적인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은 위정척사적 시각과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에 매몰된 상황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근대적 국제정치와 외교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13)]

당시 조선의 복합적이고 모순적 국제정치 상황은 단연 청과의 관계였다. 청은 일본이 진출하자 그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조선에게 서구와의 외교관계도 열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자 청은 재빨리 군대를 파견하여 원세개(袁世凱)로 하여금 조선 정치에 깊이

---

12) 조선 말의 외교를 위한 근대적 정부 기구의 설립에 대하여는 전미란(1989); 김수암(2000)을 참조할 것.

13) 이러한 측면은 조선에의 국제법의 도입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김용구(1993); 이한기(1980); 최종고 (1982) 등을 참조.

개입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청일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조선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에 청과 조선의 관계는 애매모호한 성격이었다. 청은 조선과의 전통적인 조공 관계를 근대적 의미에서의 속국(屬國)으로 변환시키려 하였고 조선의 지식인 관료들은 전통적인 관계와 근대적인 관계는 다름을 역설하여 저항하였다. 청은 자신의 조선과의 특권적 관계를 주장하여 서구 열강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병합하려 했고 조선은 청과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관계는 근대 국제법의 틀에서는 타당할 수 없음을 들어 독립적 주권을 주장하였다(유길준 1995; 구선희 1999; 권석봉 1986; 김기혁 1984).

IV. 우리의 근대적 외교

조선에서 서양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개화 또는 근대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18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80년대부터였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기부터는 서양인들이 직접 활동하기도 하였다(김영작 1989; 박충석 1996).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는 근대적 제도가 이미 없지 않았지만 개화파는 이미 없었고 특히 당시 조선에 청나라 군대와 함께 주둔하던 원세개(袁世凱)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개혁도 거의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청나라는 조선의 군사력 증강을 엄격히 억제하였고 조선은 마지막까지 본격적인 군사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실제로 조선이 근대적인 외교 행위를 시도했던 것은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이 발발하여 일본이 승리한 후 삼국간섭(三國干涉)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견제하는데 성공한 경우일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은 역사적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閔妃)로 알려져 있다(이배용 1995).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외교의 시도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지속되지도 못했다. 첫번째 시도는 당장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끝나고 나아가서 근대적 외교로부터 커다란 후퇴를 의미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곧 우리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정치적 갈등이 진행된다. 즉 친일파(親日派), 친노파(親露派), 친미파(親美派) 등의 갈등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내각을 구성하여 집권했고 각 파들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세력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해 보려 하였다. 또한 이러

한 정치적 갈등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독립(獨立)'이라는 말이 강한 정치적 의미를 띠며 사용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갑신정변 때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하여 '독립협회'가 결성되고 〈독립신문〉이 발행되었다. '독립'이란 이후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정치언어로 성립되고 근대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다(신용하 1976).

이러한 사태 진전은 우리에게 근대적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우리는 당시 지배층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과 정신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당시 조선은 근대적 외교를 시도하였지만 일본 공사가 지휘하는 소수의 무사들로부터 왕궁을 경비할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후에도 고종(高宗)은 신변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꼈고 이는 바로 아관파천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급격한 정변과 폭력적 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그 후에 벌어진 친노파, 친일파의 갈등도 바로 이러한 사태의 연장이었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외교의 실패는 바로, 군사력, 실력 또는 물리적 국력에 적절한 뒷받침이 없는 근대적 외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독립이란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 뿐이었다. 국력이 없는 독립이란 허망한 것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외교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단적으로 조선 말에는 근대적 외교가 가능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근대적 외교가 전통적 외교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문제는 근대적 외교를 뒷받침할 무게 중심 즉 닻(anchor)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대적 외교란 국제정치라는 힘의 장에서 작용하는 언어 행위이며 외교가 전략적으로 실행되었을 때는 힘의 장에서 벌어지는 반동(反動) 또는 반발력(反撥力)을 소화하고 이러한 힘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근대적 외교란 따로 떼어서 독자적인 행위영역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일정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갖춘 한에서만 근대적 외교란 가능한 것이었다.

전통적 외교 즉 중국과의 사대자소 관계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도 국가의 독립과 존속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대적 외교는 군사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력(國力, national power)를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전적 현실주의적(realist)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외교 능력은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간의 국제정치의 전쟁과 평화, 외교, 협상, 교역 등

모든 상호작용은 국력의 증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외교란 최소한의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는 의미 없는 것이다.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근대적 외교는 결국 격랑에 휩싸인 일엽편주(一葉片舟)였다. 조선의 외교적 움직임을 경계한 주변 강국들이 막강한 실질적 국력, 말하자면 군사력과 재력(財力)을 대규모로 사용하며 접근하자 외교를 행해야할 주체는 위치를 정할 수 없게 되고 주변 강국들은 '친~파'들을 조선 국가 내에 만들어내며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분해(分解)해 나갔다. 청일전쟁, 동학농민봉기로부터 노일전쟁까지의 국제정치적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의 움직임의 필연적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올라가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조선의 패망은 임오군란의 발발과 청군(淸軍)의 개입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1904년 노일전쟁(露日戰爭) 이후 일본은 무력을 통해 동북아세아에서의 패권을 확보했고 이는 영국과의 동맹 등을 통해 열강에 의해 확인되었다. 곧 다음해에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1905년의 을사조약은 당시에도 그 역사적 중요성이 처절하게 의식되던 사건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는 과정에서 우선 외교권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바로 조선의 경우 외교는 나름대로 최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일본에 대항할 수 없었고 이에는 외교가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조선은 당시에 외교를 통해 독립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외교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략에 장애물이었을 뿐이었다. 을사조약 이후에도 조선의 경우 외교를 통해 국권을 유지해보려는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07년의 헤이그(The Hague) 밀사사건(密使事件)이었다. 이 경우 또한 삼국간섭의 경우와 크게 달랐다고 볼 수 없다. 밀사사건은 일본을 당혹시켰을 뿐이었다. 일본은 다시 한번 폭력으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얼마 남지 않은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는 곧, 3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일본은 조선을 병탄시키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외교보다는 안중근의 총탄이 일본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외교라는 행위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도 외교는 여전히 중요한 행위 영역이었고 행위의 의미는 논쟁거리였다. 3 · 1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상해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는 정책 분야의 하나였고 이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이승만에게 외교는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많은 임정 요인들은 이러한 입장에 크게 반발하였다. 즉 독립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무장 투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외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강대국에 구걸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전통적 외교와 근대적 외교는 그 정의(定義)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외교주의자'였던 이승만은 그의 반대파의 거두인 단재(丹齋) 신채호와 같은 세대의 민족주의자였다(신용하 1984).

당시 이 갈등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의 사상적 갈등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독립과 국력은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다. 단재에게 우리 국력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불가결의 요소는 정신(精神)이었다. 독립의 출발은 정신이며 나라의 육체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정신밖에 없고 오직 정신의 힘에 의지하여 군사력과 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강대국에 구걸하는 외교에 의존해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단재의 강한 주장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승만의 외교 즉 미국의 힘을 빌어 독립하겠다는 것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 외교, 말하자면 비굴한 행위이며 이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에게 고개를 숙이며 생존을 보장받던 그런 망국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국력과 독립의 관념은 단재보다 훨씬 현실주의적인 것이었다. 이승만에게도 독립이란 투쟁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독립과 국력이란 물리적인 자원들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히 정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러한 물리적인 자원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가 망명지를 미국으로 택한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일제 강점기의 모든 독립운동을 통해 가장 많은 재원을 충당한 것은 소련 정부를 제외하고는 이승만이 조달하던 미국 교민들의 지원금이었다. 물론 이승만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저명인들에게 하던 행위는 결코 조선 관리와 사신들이 중국에서 하던 전통적 외교와는 별로 닮은 점은 없었지만 외교를 통해 독립을 얻으려는 활동은 근대적 외교와 결코 같을 수 없었다. 그가 미국에서 행하던 활동은 우리 민족은 일본 민족과는 다른 긴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설파하여, 우리 민족은 세계 정치의 정당한 일원임을 설득하는 것과 일본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제국이며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미국

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건국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벌인 외교 활동은 전통적 외교와 근대적 외교의 혼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공화국 시절 외교의 일차적인 목표는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었고 당연히 한국은 미국을 종주국으로 대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까지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 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 시대와는 달리 세계의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과의 관계 또한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기회도 있었고 조약을 체결할 법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근대적 외교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중국의 중화주의와는 달리 비공식적 제국주의였고 우리는 그 주변부에 존재하는 이상 전통적 외교와 근대적 외교를 혼합하여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구조는 냉전이 와해되던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 내에서나 우리사회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순적인 외교 행태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자성 또한 반복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의 지식인들은 북한의 외교와 비교하며 우리의 외교의 전통적 성격, 말하자면 비근대적, 비민족주의적 성격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북한의 경우는 강력한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그러한 군사력에 근거하여 근대적 외교를 1970년대부터 일관되게 진행시켜 왔다. 특히 강대국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남쪽의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근대적인 외교를 실행해 온 셈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대실패였다. 그 이유로 북한은 제2차 대전 이후에 진행되어온 탈근대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외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논할 것이다.

남쪽의 대한민국의 경우는 5 · 16 이후에는 민족주의와 근대적 외교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자주적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력 발전의 조건을 우선시 하여 군사력 증강을 자제하는 한편 군사력의 부족한 부분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여 보충하려 하였다. 즉 민족적 독립과 주권의 문제는 장래의 문제로 설정한 채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현재의 생존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견디며 지탱해 온 것이다. 따라서 60년대에는 경제발전 우선 전략을 채택하였고 70년대에는 자주국방의 목표가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였다. 1970년대 말 한때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문제

로 미국 정부와 심각한 외교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외교에서는 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심지어 이에 대해 비판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은 위험한 이념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근대적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한국 외교는 '친미', '사대외교'였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용미(用美)'였다.

북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는 아직은 적어도 대실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만큼 근대성을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의도치 않았던 성공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의 문제는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근대적 외교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한 지표는 바로 20세기 초 언제부터인가 등장하여 현재에도 회자되고 있는 '외교주의'라 할 수 있고 그 한 예가 바로 영세중립국론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과 외교협상을 통해 그들로부터 상호 보장을 받아 영원히 안보를 보장받고 이념 진공 상태의 순수한 민족국가로 평화롭게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일은 많진 않지만 전통적 외교 관념과 근대적 외교 관념의 기묘한 결합으로 나타난 왜곡된 국제평화주의였다.

V. 탈근대적 외교

위에서도 이미 지적한 대로 탈근대적 외교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말이며 그 이유는 탈근대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 학계에서도 정확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탈근대라는 말에서 지적되는 것은 근대의 근대국가 체계와 그를 수반한 문화가 구조적으로 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한다. 아직은 탈근대라는 개념은 근대라는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적극적 가치에 의한 새로운 사회 · 정치 체제의 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아직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개념일 뿐이다. 탈근대로의 변화 또한 새로운 요인의 등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성 내부의 변화 또는 이념으로서의 근대성이 현실과 조우한 결과로 보인다.

국제정치 수준에서 탈근대라는 문화 · 정치적 상황은 구체적으로는 근대의 근대국가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말하며 따라서 주권(sovereignty)의 해체(解體)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이후의 유럽통합(European Integration)은 탈근대 국

제정치의 중대한 지표가 된다. 유럽통합은 물론 제2차대전 이후 서구의 국가들이 주도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권력, 주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만든 의도가 국가권력의 강화였다고 해도 주권 개념의 해체를 초래했음에 분명하다. 또는 유럽통합은 국가권력과 주권의 분리였다고 볼 수도 있다. 고전적 사상에서 주권은 나눌 수 없는(indivisible) 것이었지만 유럽통합에 의해 주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유럽 통합에 따른 주권 이론의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유럽 통합을 통해 주권들을 '풀한다(pool)' 즉 여러 주권들을 모아서 더 큰 힘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주권론의 변화를 공식화할 따름이다. 원래 주권이란 갖고 여기 저기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주권들과 섞여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풀한다'는 표현은 고전적 주권 사상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은유(隱喩, metaphor)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처음부터 주권이란 사실이 아니라 픽션(fiction)이자 이념(ideology)이었기 때문이다.

주권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는 외교 행위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은 경제적인 이해(利害, interest) 자체가 국가 정책, 외교의 주요한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국가 논리의 핵심에서 경제적인 이해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력(national power)의 한 부분으로써 국력의 현실적 부분인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국가의 경제적 부(富, wealth)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근대성의 총체적 개념이 주권론과 함께 해체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유럽 통합 외에도 제2차대전 이후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에는 동일하게 탈근대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면 국가의 경제적 부는 이제 '경제력(economic power)'으로 독자적인 힘으로 발전하고 어떤 국가의 경우는 '경제 초강대국(Economic Superpower)'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경제 초강대국'이라는 말은 근대적 국제정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말 자체는 근대적 국제정치는 이미 해체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으로 근대국가 내부의 정치·사회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

---

14)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Alan Milward라 할 수 있다. Milward (1992).

이었다. 서구 근대국가의 출발에서 경제 문제가 등장한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군대를 유지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원(稅源)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18세기부터 중상주의(mercanti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이 등장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에서 시장의 독자성이 제시되자 국가 권력, 특히 왕권의 자의적인 개입은 경제에 파괴적 요소로 나타났고 따라서 정치와 경제는 전혀 다른 논리에 따른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19세기에 들어서면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로 발전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국민들의 복지 문제로 개입주의(interventionism)이 나타나고 20세기 전반을 통해 서구 열강들은 국내적으로 민주화되었다. 이제 경제는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권자인 국민들의 복지의 문제로 정의되었고 국가 권력은 경제 문제를 국가이익에서 분리되어 정권 유지를 위해 접근되었다. 경제가 이념에서 현실로 등장하자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의 단일성은 분해되기 시작하였다.[15)]

제2차 대전 이후 각국의 경제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 체제 하에서 해결되어야 했고 이때 경제문제는 군사문제, 정치문제와는 다른 그 자체 독자적인 문제였다. 유럽통합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한 수단이었고 결국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기어이 주권을 상호 제한하는 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유럽통합을 주장한 일부 사상가들은 국가의 해체와 정치 통합을 요구했다. 유럽통합의 최초의 계기가 된 석탄과 제철 산업의 국제화는 고전적 근대국가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다. 유럽통합은 획기적인 발상 전환에 따른 변화였다. 나아가서 1970년 이후 전세계적 규모로 전개된 자유무역 체제 또한 본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자율성, 특히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널리 회자되고 있는 지구화(Globalization)는 무역과 금융 문제를 핵심으로 하며 이는 분명히 국가의 주권을 잠식하고 있다.[16)]

나아가서 주권이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가 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외교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19세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지만 제2차

---

15) 경제의 이념적, 현실적 분리와 국가의 단일성의 해체에 대하여는 최정운(1992)를 참조.

16) Globalization과 탈근대는 결국 유사한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Globalization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는 Baylis & Smith(1997)을 참조.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제 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그의 행위자적 성격은 국제연합(UN)을 위시한 정부간 기구뿐만 아니라 현재는 급속히 팽창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들은 영토나, 민족이나, 주권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임에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우는 법적으로 회원국들과 동일한 독자적인 국제정치 단위임을 공식화하고 있고 실제 적어도 일개 회원국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현재 서구 지역의 경우에는 국제정치에는 근대국가에 종속된 기구이던 지방행정 단위들 또한 각자 국제정치 경제 무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구화된 국제정치의 장에는 국가들 외에도 국가들이 법적으로 조직한 초국가적 단위 외에도 국가의 하부기구인 지방정부 나아가서 국가와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NGO 등의 조직체들이 모두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고전적 근대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물론 현재 국가들은 여전히 지배적인 주체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언제 역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제2차 대전 이후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는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 분야로 등장하였다. 단적으로 문화외교란 각 나라들이 그들의 문화를 전세계에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고 선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분적으로는 물론 근대민족국가가 성립된 19세기 말부터 일부 행해져 왔지만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전문 정부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7] 문화외교는 국력(national power)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근대적인 국제정치적 갈등과는 다른 수준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문화 수준 또는 문명수준을 전세계에 어떤 경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 또는 어떤 민족의 세계에서의 위상, 즉 가치의 높고 낮음을 다투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외교는 전쟁이라는 전통적 국제정치행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들 간의 게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인 행위 또는 게임은 고래로부터 행해져 왔던 정치행위임에 분명하다. 여러 차원의 담론(discourse)을 통해 적국을 야만으로 매도하고 자신들

---

17)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외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Rigaud(1995).

이 세계에서 가치 있는, 존재할 가치 있는 나라임을 주장하는 행위는 동서고금에서 결코 낯설은 행위가 아니다. 동북아세아에서 고대로부터 이루어지던 전통적 사대외교 또한 고전적인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게임이었고 근대서구의 문명 개념 또한 이러한 문화 정책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힘,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정치에 가려 주변으로 밀려 있던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국제정치는 근대성이 해체되기 시작하자 다시 중심적 위치를 회복하고 있다. 현재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의 주제로 자리 잡은 경제 문제 또한 이러한 문화 정치의 차원과 중첩되어 이루어진다. 제2차 대전 이후 국가의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한 국민총생산(GNP) 등의 지표 산정은 국가의 수준, 문명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었다. 각국이 국제정치의 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 부란 많은 경우 군사력으로 환원할 자원으로서 또는 국민 복지의 향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지표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지표는 각국의 유권자들이 현실을 파악하는 수단이며 이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18)]

이러한 문화 외교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한편에서는 해외 문화원들을 두어 행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적 대중 매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여러 나라들은 큰 국제적인 행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존재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이를 알리려고 한다. 여러 나라들은 엄청난 자원을 들여 자국의 언어를 해외에 보급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며 영화 등 각종 예술 행위의 수준을 알리려 해외에 많은 공연 활동을 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국가의 이익에 직접 이바지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인다. 자국의 여러 상품 브랜드들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각국이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가치 있는 인류의 복지와 문화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은 장래의 모든 국제정치에서 벌어지는 갈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외교 게임을 통해 어떤 나라는 세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어떤 나라는 인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야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의 중요성

---

18) 국제정치에 있어서 문화 담론의 정치적 의미와 문화외교에 대하여는 최정운(1998)을 참조할 것.

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라도 국제사회에서 야만으로 규정된다면 언젠가는 주변 국가들의 연합군에 의해 초토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의 전통적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근대적 민족국가로 제2차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 근대성을 이루지 못한 채였고 더구나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 이미 근대국가가 해체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우리의 근대국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태어나 초기부터 복합적 외교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우리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전통적 외교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세계의 국제사회와 근대적인 외교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1960년대부터는 수출을 통해, 자본주의적 국제경제 체제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근대국가로서 자립하려 하였고 따라서 초기부터 경제 문제를 둘러싼 외교 행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며 민주화의 규범이 확산되자 국민복지를 위한 경제 발전은 새로운 차원에서 외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아가서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무역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외교에 우리는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는 아직도 전문성이 모자라며 문화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가 대실패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현재 탈근대적 외교에 등한했기 때문이다. 근대적 외교의 핵심적 측면은 주권과 국력 그리고 전략적 행위 그리고 적(敵) 개념의 설정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근대적 외교의 다른 면에는 이미 다원적인 국제적 협력 관계의 형성과 유지라는 규범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설정은 그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른바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17세기 이래 서구의 근대국가 체제는 분명히 한편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포함한 힘의 갈등과 전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들의 관계는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19] 말하자면 서구의 근대국가 체제는 국가

19) 근대국가들의 관계를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

들 상호 간에 잠재적 적국이지만 동시에 평상시에는 공통의 규범을 준수하는 '좋은 이웃' 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물론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루는 모든 사회관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의 참여라는 면에서 북한의 외교는 대실패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힌지 오래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에서만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의 현실주의 일방 정책과 그에 따르는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희생 강요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야만(barbarian)' 으로 낙인찍히게 된 이유였고 여기에는 탈근대적 문화 외교 제도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이 그 동안 추구해 왔던 외교 정책과 행태는 어쩌면 너무나 성실하게 서구의 근대성 특히 근대적 현실주의(realism) 이념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비롯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힘, 특히 물리적 폭력에 집착해왔고 이는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근대성에서 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몽주의에서 등장한 문명(文明, civilization)에 대한 개념이었다. 문명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었다. 우선은 서구 외의 타 지역 사회에 대한 경멸과 오만함이 그의 한 측면이었다면 국가들에 대한 가치 판단과 비교를 중요한 측면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후자의 측면은 동서양의 사상에서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문화 체계의 기준이 뚜렷하게 작용해 왔다. 여러 나라들은 군사력, 힘 외에도 문물의 미학적 가치,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의 경제 · 문화생활 수준을 비교하여 서로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해 왔다. 이러한 복합적 기준에서 현대에는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 어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많은, 가치 있는 나라로 판단되고 또 어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존속해야 할 이유가 적은, 또는 존속해서는 안 될 가치 없는 나라로 판단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혁명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 사상은 인류 문명의 보편성을 부정해 왔고

제정치학과 구별되는 이른바 British School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Bull(1977); Wight(1977); Mayall(1982) 등이 있다. 특히 British School의 태두라 할 수 있는 Martin Wight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국제사회의 관념은 16세기에 즉 17세기의 Westphalia Treaty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Wight(1977).

오직 그들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역사철학적 운명에 직참해 왔다. 서구 근대의 문명 개념에서 힘은 위대성(Grandeur)의 상징으로써 문명의 중요한 요소지만 힘은 또는 힘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야만의 핵심적인 특성이었다.[20)]

VI. 맺음 말

지난 백년간 우리는 빠른 속도로 역사를 겪어왔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했다. 불과 백년 전만 해도 우리는 소중화주의에 젖어있었고 전통적인 외교를 통해 동방예의지국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양의 금수(禽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다. 중국 천자에게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의리를 지킴으로써 안보와 존엄성을 획득하는 것을 외교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가 근대적 외교에 눈뜨고 적응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조선은 회생 불능한 상황에서였다. 나라와 민족이 존엄성을 차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대적 외교란 생존을 위한 문제였지만 생존은 외교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실제 국력, 군사력의 기반이 없이 외교란 별 의미가 없었지만 외교밖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외교주의' 또 한편으로는 '투쟁만능주의' 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건국했을 때에는 이미 근대국가의 세계는 기울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냉전이 시작되고,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 체제로 자리 잡아가고, 국제기구 등이 새롭게 나타나고, 전세계적인 통신과 대중매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슈를 따라 외교에 임하고 있고 또한 전통적, 근대적, 탈근대적 외교가 중첩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교는 전통적 외교, 근대적 외교, 그리고 탈근대적

---

20)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 은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하는 국제정치에서는 문명과 야만의 판단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구에서 회교권을 문명으로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갈등에 임하고 있는 것은 근대에 회교권을 야만시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들 간의 갈등은 '문명충돌' 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Huntington(1996)을 참조. 기독교권과 회교권의 역사적인 갈등 관계의 구조에 대하여는 Said(1979)를 참조할 것.

외교 등의 다른 의미와 관념 그리고 형식들을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통적 외교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근대적 외교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더구나 탈근대적 외교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에는 상당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권과 독립 의식의 부족 그리고 전통적 외교 관념의 상존의 문제들은 반드시 국가 전략과 외교 자체에 대한 관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념적 접근, 즉 일방적 근대화가 문제의 해결책일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교에는 시대와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만 동시에 동서고금을 통하는 보편성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자칫 외교는 현실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크게 보면 외교는 정치적 삶의 일부이며 특수한 목적의 상위의 차원에 있다. 말하자면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는 것은 자연스런 삶의 일부이며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는 생각은 근대서구의 이념일 뿐이다. 그리고 특수한 목표의 달성은 이러한 일상적인 외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나아가서 외교는 이제 정부의 전문 기구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특히 탈근대적 외교란 사회의 모든 분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외국의 여러 분야와 교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더구나 현대의 문화외교 분야는 우리의 의도와 활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치가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외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국제정치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문제는 소수의 권력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왔고 외교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에게는 국가적 전략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무부 또는 외교통상부의 전문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정치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우리의 경우 외교관들은 주로 하루하루의 행정 일과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매달려 왔을 뿐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의해서 제한되어 왔다. 우리의 국방력 자체가 미국에 의존해 있는 이상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의 국가 전

략을 구상할 지적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지적 능력이란 여기에서 정부 기구나 정치기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학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의 외교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듯 다양하고 복합적인 외교 행위의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지적 능력이다. 세부적이고 각론적인 문제점들은 각 부분들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설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외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외교의 문제는 바로 철학적 문제로 귀착된다. 솔직히 우리의 외교의 문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의 부재의 문제와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 부족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근대사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 왔던 전통적인 유학(儒學) 전통을 철저하게 파괴해 왔고 우리가 근대에 받아들인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우리의 근대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민족주의의 한 변종으로서의 저항민족주의 특히 민중주의(民衆主義)였다. 민중주의는 우리 근대사상의 독창적인 부분이었고 이에는 구조적인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가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민족주의의 변종은 민족적 피해망상(被害妄想)으로써 해방 이후에도, 나아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속하고 있다.[21] 나아가서 우리 민족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로 미국의 종속국 상태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지식인들은 나름대로 일본의 문물에 대해 저항을 시도해 오기도 했지만 미국에 대하여는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오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우리의 정치 · 경제적 이념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자원은 모두 미국에 의존해 왔고 우리의 토착적 지적 자원은 불신되어 왔다.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미국과 서구에 대한 지적 식민지의 위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21) 우리 민족주의의 특수한 모습을 이용희, 노재봉은 저항 민족주의라 하였다. 이용희 · 노재봉 편(1977); 우리의 근대 반지성주의에 대하여는 최정운(2001) 참조.

참고 문헌

구선희. 1999.『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서울: 예원.
권석봉. 1986.『청말 대조선정책사 연구』. 서울: 일조각.
권선홍. 1986.「동아시아 개항기의 불평등조약 연구 — '문명기준'의 시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금장태. 1984.『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김기혁. 1984.「근대조선에 있어서 한 · 청 · 일관계의 전개」.『사상과 정책』4.
金壽岩. 2000.「韓國의 近代外交制度 硏究 — 外交官署와 常駐使節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外交學科, 政治學博士學位論文.
김영작. 1989.『한말내셔널리즘연구』. 서울: 청계연구소.
김영작. 1995.「한중일 3국의 개국에 관한 비교연구」.『동북아』창간호.
金容九. 1993.「西洋國際法理論의 朝鮮傳來에 관한 小考(1)」,『泰東古典硏究』第十輯: 499-522.
金容九 · 하영선 공편. 1996.『한국 외교사 연구』. 서울: 나남.
金容九. 1997.『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김원모. 1982.『근대한미교섭사』. 서울: 홍성사.
김한규. 1982.『고대 중국적 세계질서』. 서울: 일조각.
김홍철. 1985.『외교제도사』. 서울: 민음사.
동덕모. 1983.『한국의 개국과 국제관계』. 서울: 서울대 출판부.
동덕모. 1984.「동양에 있어서의 전통외교의 개념 — 한국의 전통외교를 중심으로」,『논문집』제8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문중섭. 1998.『한말 서양정치사상 수용』.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민두기. 1986.「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 위기의식」.『동방학지』52.
박충석. 1996.「동북아 근대사에 있어서의 서구 수용」.『동북아』제4집.
손승철. 1994.『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서울: 지성의 샘.
愼鏞廈. 1976.『獨立協會硏究』. 서울: 일조각.
愼鏞廈. 1984.『申采浩의 社會思想 硏究』. 서울: 한길사.
兪吉濬. 1995.『서유견문』, 허경진 옮김. 서울: 한양출판.
유영익 외. 1994.『한국인의 대미인식: 역사적으로 본 형성과정』. 서울: 민음사.

이광린. 1989.『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李能和. 1968.『朝鮮基督敎及外交史』. 서울: 學文閣.
이배용. 1995.「개화기 명성황후 민비의 정치적 역할」,『국사관논총』 제66집.
이성규. 1995.「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 외.『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지성사.
이완재. 1989.『초기개화사상연구』. 서울: 민족문화사.
이용희. 1962.『일반국제정치학』(상). 서울: 박영사.
이용희 · 노재봉 편. 1977.『한국민족주의』. 서울: 瑞文堂.
이용희. 1994.『미래의 세계정치』. 서울: 민음사.
이태진. 1997.「서양 근대 정치제도 수용의 역사적 성찰 — 개항에서 광무개혁까지」,『진단학보』 84집.
이한기. 1980.「한국과 일본의 개국과 국제법」,『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9.
전미란. 1989.「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이대사원』, 24 · 25집.
전해종. 1962.「통리기무아문 설치의 경위에 대하여」,『역사학보』 제17 · 18집.
전해종. 1966.「대외관계관서의 변천」,『한국근세 대외관계문헌비요』. 서울대학교 동아문제연구소.
전해종. 1977.『한중관계사연구』. 서울: 일조각.
전해종 외. 1988.『중국의 천하사상』. 서울: 민음사.
정옥자. 1998.『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崔丁云. 1992.『지식국가론』. 서울: 삼성출판사.
崔丁云. 1998.「국제정치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國際問題硏究』 第22號, 서울대학교 國際問題硏究所: 42-58.
崔丁云. 1999.「서구의 이성, 과학, 진보」, 계간『사상』(겨울호): 90-111.
崔丁云. 2001.「한국 반지성주의의 기원과 의미 —『임꺽정』의 사상 분석」, 한국정치사상학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11월 17일.
崔丁云. 2002.「정치 언어로서의 전통과 문화로서의 전통」,『전통과 현대』 통권 22호(겨울호): 19-34.
최종고. 1982.『한국의 서양국제법 수용사』. 서울: 박영사.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1992.『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黃遵憲. 1988.『朝鮮策略』, 趙一文 譯註. 서울: 建國大學校 出版部.
Anderson, M. S. 1993. *The Rise of Modern Diplomacy*, 1450~1919. London: Longman.
Baylis, John & Steve Smith, eds. 1997.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urke, Edmund. 1968. *Reflections on the Revoluion in France*, ed. C. C. O'Brien. Harmondsworth: Penguin.

Deuchler, Martina. 1977. *Confucian Gentleman and Barbarian Envoys: The Opening of Korea 1875~188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Eisenstadt, S. N. 1973. *Tradition, Change, and Modernity*. New York: Wiley.

Foucault, Michel. 1966.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Gong, Gerrit W.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milton, Keith & Richard Langhorne. 1995. *The Practice of Diplomacy: Its Evolution, Theory and Administration*. London: Routledge.

Heller, Agnes & Feremc Fehér. 1988. *The Postmodern Political Con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New York: Simon & Shuster.

Lerner, Daniel. 1958.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Glencoe: The Free Press.

Lyotard, Jean-Franç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s: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rey Bennington & Briam Massumi.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attingly, Garrett. 1955. *Renaissance Diplomacy*. Boston: Houghton Mifflin.

Mayall, James, ed. 1982. *The Community of States: A Study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Milward, Alan. 1992.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 State*. London: Routledge.

Nicolson, Harold. 1950. *Diplom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Nicolson, Harold. 1954. *The Evolution of Diplomatic Method*. London: Constable.

Palais, James B.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gaud, Jacques. 1995. *L'exception culturelle: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Bernard Grasset.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Shils, Edward. 1981. *Tra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tson, Adam. 1983. *Diplomacy: The Dialogue Between States*. New York: McGraw Hill.

Weber, Max. 1976.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Intro.

Anthony Gidde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Vol. 2, eds.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ght, Martin. 1977. *Systems of States*. Ed. Hedley Bull. Leicester University Press.

ABSTRACT

Traditional, Modern and Postmodern in Korean Diplomacy

Choi, Jungwo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last 100 years Korean diplomacy has undergone radical changes. We have experienced the traditional diplomacy in the last years of the Chosun Dynasty, the modern diplomacy from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nd the postmodern diplomacy for the last few decades. The traditional diplomacy is meant by the diplomacy within the traditional Chinese world system, and the modern diplomacy is meant by the diplomacy practiced within the Western modern state system, and the postmodern diplomacy is meant by the diplomacy with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nd the erosion of classical modern state system. These different forms of diplomacy has been imposed by the world system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but if we see the present situation, we cannot say that a specific form of diplomacy is exclusively practiced. In Korean diplomacy, traditional diplomacy remains still an important part, and modern diplomacy is not yet fulfilled, and postmodern diplomacy already occupied a significant part of it. The problems in Korean diplomacy cannot be resolved by exclusively fulfilling the ideology of modern diplomacy, but can only be resolved by enlarging our general intellectual faculty for thinking deeply out the world and ourselves.